

# Hansun Brief

발행일: 2017년 8월 16일(통권48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일자리 파괴 핵폭탄

김 대 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 요 약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은 산업과 고용을 초토화하는 핵폭탄이다.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 보장 수단도, 가계소득 증대 수단도 아니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수단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은 산업과 고용의 퇴출·존치 여부가 기준이기에, 실업급여, 기초생활보호 관련 지출, 기초연금, 학비·생활비 보조 등 사회안전망 수준 및 생산성 낮은 자본·노동의 퇴출, 재교육·재배치 등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과 연계해서 책정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보다 공공건설 공사 등에서 하는 일에 비해 형편없는 처우를 받는 근로자들을 위한 '적정임금' 을 도입하고, 근로장려금과 각종 사회수당 등으로 '사회임금'을 높이고, 임금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이 훨씬 정의롭고 일자리 친화적이다.

최저임금 1만원 운동은 고학력 청년백수의 양산,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계층 이동성의 약화, 저임금 문제에 대한 국가의 무책임 등이 합작한 기형이다.

최저임금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처럼 차가운 머리로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이상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시키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한 적용 제외, 지역연령별 차등 적용(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80%나 90% 적용), 건설과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 감축 등 거센 후폭풍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018년 최저임금, 16.4% 1,060원 인상, 시간당 7,530원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했다. 2017년시간당 6,470원 보다 1,060원(16.5%) 오른 7,530원으로, 주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57만 3,770원이다. 17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16.4%, 월 22만1,540원)로,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 7.4%의 2.2배다. 문재인 행정부는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있는 수백만 명의 소득이 월 22만원 가량(주40시간 정규직 기준) 오를 것이며, 맨 아래(기저)층의 임금이 올라가면서, 그 위에 있는 모든 층의 임금을 연쇄적으로 밀어 올려,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이전하여, 내수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당연히 이런 장밋빛 기대의 대전제는 우리 기업들 대부분이 지불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서 임금을 낮게 유지한다는 것이다. 물론 올려줄 여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으로도 일할 사람이 넘치기에,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한계상황에 봉착하여 사업포기(해외이전 등), 고용 감축(외주하청화), 노동시간 단축 등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곤란한 기업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의 영향권에 있는 산업 현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따른 일파만파 영향을 시뮬레이션 한 흔적은 없다. 최저임금을 소폭 올린다면 시뮬레이션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대폭 올리면서도 시뮬레이션을 건너 뛴 것은 정책의 기본과 원칙에서 크게 어긋난 것이다.

## 최저임금제의 본질과 기업의 실질부담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 보장 수단도, 가계소득 증대 수단도 아니다. 노동시간이나 근로기회(일자리)를 보

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수단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수준은 산업과 고용의 퇴출·존치 여부가 기준이기에, 실업급여, 기초생활보호 관련 지출, 기초연금, 근로장려금과 각종 사회수당 등 사회안전망 수준과 생산성이 낮은 자본·노동의 구조조정, 재교육·재배치 전략 등과 연계해서 책정해야 한다. 산업·업종별 경영 사정, 임금분포와 고용 수요·공급에 따른 산업·지역별 노동시장 사정, 노동이동성과 고용유연성 수준 등을 살피는 것도 기본이다.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 많지만 여기서는 고용임금 관련 국제비교를 통하여, 거칠게나마 정책의 적실성을 가늠해 본다.

국제비교에 앞서서 최저임금의 산업 범위부터 살펴야 한다. 한국은 최저임금에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만 포함시킨다. 따라서 초과급여, 특별급여(보너스)도 빠지고, 숙식비 등 현물급여도 빠진다. 게다가 OECD국가 중에서 오직 한국만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매주 근로하지 않은 하루에 대해 지급하는 추가 임금)을 주어야 한다. 주휴수당만 포함해도 7,530원은 그 보다 20%가 많은 9,036원과 같다. 여기에 식비(한끼 평균 5천원, 2끼 1만원)만 포함해도 1만원이 넘어 간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숙식을 제공하고, 주휴수당까지 주는 기업의 경우 실제로는 시간당 1만원 이상의 임금을 주면서도 최저임금법 위반자가 될 수가 있다.

한편 지역, 산업, 업종, 연령별 차등 없이 일률적인 적용도 문제다. 한국은 처지와 조건이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산업, 업종, 지역, 연령별 최저임금은 같다. 하지만 일본만 해도 47개 광역지자체(도도부현)별로 최저임금이 다르다. 2016년 10월1일부터 2017년 9월30일까지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보면 東

京(도쿄) 932엔, 神奈川(카나가와) 930엔, 大阪(오사카) 883엔이며, 北海道(홋카이도) 786엔, 沖繩(오키나와)와 宮崎(미야자키)는 가장 낮은 714엔이다. 평균이 848엔이다. 일본뿐 아니라 중국,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등 큰 나라들(주로 연방 국가)의 대부분은 지역, 업종, 직종별 차등이 있다.

연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OECD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한국은 2017년 기준 16,226,760원(6,470\*209시간\*12개월)이고, 독일 17,976유로(2017), 프랑스 17,599유로(2016), 일본 1,672,840엔(2015) 영국 14,612파운드(2017), 호주 34,570호주달러(2016), 미국 15,080달러(2017)이다. 한국은 2018년에 18,885,240원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2020년에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연봉은 2,508만원이 되어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사실 우리의 생산력(1인당 GDP나 GNI) 수준을 감안하면 2017년 최저임금(6,030원)조차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 최저임금이 미치는 고용률과 가계소득

최저임금의 성격상 근로자 평균임금이 아니라 중위임금 대비 수준이 중요한데, 2015년 최신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최저임금이 5,580원(연봉 13,994,640원)일 때, 중위임금의 48%였다. 같은 시기 미국 36%, 일본 40%, 독일 48%, 영국 49%, 프랑스 62%였다. 주요국 중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2005년 67%까지 갔다가 지금 수준으로 내려 왔다. 그런데 한국의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중위임금의 60%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절대 수준도 높지만, 인상 속도는 엄청난 과속이라고 보아야 한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고용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2014년 기준 연령계층별 고용률은 독일 73.8%, 일본 72.7%, 미국 68.1%인데 반해, 최저임금이 높은 프랑스 64.3%, 한국 65.3%다. 대학진학률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15~24세와 55~64세 고용률은 전자의 경우 독일 46.1%, 일본 40.3%, 미국 47.6%이고, 프랑스

28.1%, 한국 25.8%이다. 후자(55~64세)의 고용률은 독일 65.6%, 일본 68.7%, 미국 61.3%이고, 프랑스 47.1%, 한국 65.6%다. 한국이 높은 것은 노후 사회보장 수단이 취약하고, 농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업 등을 중심으로 저임금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은 법으로 올릴 수 있지만, 최저 노동시간까지 늘릴 수는 없다. 최저임금 1만원이 지향하는 것은 최저 월급이 209만원 이상인 사회이지만 현실은 백수십 만원 받던 근로자가 실직해 월급이 0원이 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통계청의 2016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월 20.5시간이고, 월평균임금은 74.1만원에 불과했다. 2015년 하위 20%(가구원수 1.62명, 66.5세)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연 342만원, 월 28만5천원에 불과했다. 하위 20~40%(가구원수 2.47명, 52.6세)는 연 1,934만원으로 월 161만원에 불과했다. 과연 이것이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 주 40시간 이상의 근로기회를 가지고 있던 근로자 수백만 명은 온전할까? 물론 최저임금 1만원과 소득주도 성장론을 부르짖는 사람들이 하는 아름다운 상상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한 가계소득이 내수를 활성화시켜 성장을 촉진하고, 한계 산업·기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생산성 높은 곳으로 이전해 가는 것이다. 하지만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율과 가계소득 증가율을 보면, 최저임금은 2013년 6.1%, 2014년 7.2%, 2015년 7.1%, 2016년 8.1% 상승했으나, 가계소득은 2013년 2.1%, 2014년 3.4%, 2015년 1.6%, 2016년 0.6% 상승에 그쳤다.

### 최저임금과 노동이동성

2016년 6월에 발표된 2014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제조업은 총 부가가치 30.15%를 생산하고, 취업자 비중은 16.2%로 3,828,7천명이다. 서비스업은 총 부가가치의 59.6%를 생산하고 취업자 비중은 70.2%, 16,537.7천명이다. 제조업의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은 서비스업의 취업자 1인당 생산성의 2.18배다. 하지만

OECD대부분의 국가는 고용이(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물 흐르듯이 흐르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와 생산성이 거의 비슷하다. 이는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고, 고용을 꺼리는 다양한 유인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 사용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요컨대 최저임금을 급상승시키면 결국 서비스업 쪽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여기에 묶여있는 고용이 생산성 높은 쪽으로 잘 옮겨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3년 내 정규직 전환율 등 각종 노동이동성 관련 지표가 입증한다.

한편 서비스업 내에서의 생산성이나 임금 격차도 크다. 숙박음식업이나 청소, 경비 용역 같은 사업서비스업은 낮지만, 규제산업인 금융, 방송, 통신과 면허직업의 임금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부동산을 통한 진짜 지대수취도 심하다. 만약 근로자 임금분포 그래프를 그린다면, 프랑스, 독일, 일본, 스웨덴 등은 고소득층이 남산만한 높이라면 한국은 과장 좀 보태면 인수봉만한 높이이다.

### 최저임금 인상 공약의 배경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지난 대선 전에서 어느 정도 예고되었다. 2017년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했다. 안철수와 홍준표는 2022년까지(임기 내) 1만원을 공약했다. 수많은 이슈에서 정면 충돌하는 대선 후보들이 유독 최저임금 정책에 관한 한 그 차이(3년 내 1만원 대, 5년 내 1만원)가 왜 이렇게 적었을까? 그것은 2015년 전후한 시기부터 최저임금 인상이 세계적 유행이기도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알바와 저임금 직장(직종)을 전전하며 사는 20~30대 청년 및 대학생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라고 보아야 한다. 한국 20~30대 청년대학생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의 배경에는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이수한 이들의 당혹, 좌절, 불만, 절망이 깔려있다. 이들이 부모(50~60대), 대학, TV, 사회문화 등의 영향으로 몸에 배인 높은 소비지출

성향과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접한 현실의 근로조건의 괴리는 너무나 컸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자리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많지도 않고, 점점 줄어드는 계층 상승 사다리 아래서는 살인적인 경쟁이 벌어진다. 당연히 대부분은 탈락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지대수취자인데 그 어떤 정부도 여기에 시장과 경쟁 원리와 개방을 통해 이를 선진국식으로 개혁하려 하지 않았다. 게다가 한국은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고, 인력사업 구조조정은 가장 어렵고, 노동이동성은 가장 낮다. 그러면서도 건설, 농업, 3D 제조업 등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너무 무차별적으로 개방해 버렸다.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표방하는 가치와 달리 불평등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내달리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들 역시 OECD평균이나 선진국의 정책적 유행에 머리를 수그렸고,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청년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60세 청년강제연장법,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정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과 더불어 역대급 나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처럼 차가운 머리로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결정 거버넌스를 바꿔야 한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이상, 상여금과 숙박비를 포함시키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한 적용 제외, 지역연령별 차등 적용(65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80%나 90% 적용), 건설과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 감축 등 거센 후폭풍을 막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